

5년간 도내 신규 고속도 건설 '0건'

국토부 중기 투자계획 확정
삼척~제천 고속도로 포함
속초~고성·춘천~철원 제외
대선공약 반영돼도 5년 지연
속초~양양 구간 오늘 개통

동해고속도로 속초~양양 구간이 24일 개통되는 가운데 도내 제1 SOC 속원사업인 삼척~제천고속도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제4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에서 삼척~제천고속도로가 제외, 내년 통통천~양양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향후 5년간 도내 신규 고속도로 건설은 단 한 건도 없는 '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도와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토부의 고속도로 예산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에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등 신규사업 4곳과 동흥천~양양 간 고속도로를 계속사업 9곳이 확정됐다. 하지만 삼척~제천고속도로를 비롯해 속초~고성 고속도로, 춘천~철원 고속도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올 연말 완료 예정으로 5년마다 짜이는 국토부의 '도로건설 관리계획'에서도 제외되면, 향후 5년간 도의 최대 인프라 사업인 삼척~제천 고속도로 추진은 쉽지 않은 실태이다. 김재진 강원발전연구원 박사는 "현 시스템대로라면 내년 12월 대선 공약에 반영되더라도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그만큼 연말 정부의 관리계획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뽕택과 삼척을 잇는 250.4km의 고속국도 40호선 건설 사업 중 뽕택~제천 127.2km 구간은 이미 개통됐지만, 강원 남부권의 제천~삼척 123.2km구간은 착공조차 안 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삼척~제천고속도로의 관리계획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했다.

한편 동해고속도로 마지막 공사 구간인 양양~속초 18.5km 구간이 완공, 24일 오후 2시 속초나들목에서 개통식을 갖는다. 황민진·류재일기자

건설법 개정안 추진 공사수주 위축 우려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입찰 담합 삼진 아웃제 등 담겨
업계 "과도한 중복 처벌" 반발

건설업계가 입찰 담합 삼진 아웃제와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입찰 담합 횟수 산정기간을 삭제하고 건설현장과 완공 시설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건설자재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했다.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

특히 현행 3년 이내 3회인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횟수를 시기와 상관없이 총 3회로 강화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무죄추정 및 책임주의 원칙에 벗어나고 원산

지 표기 역시 자유시장경제에 위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종합건설업계는 물론 최근에는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도 반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중복 처벌인 동시에 업계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건설업계 전체가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악의적 담합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담합 적용기간이 삭제되면 기업활동을 하기 어려워진다"면서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는 단속을 강화하거나 온라인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공사 수주 활동이 위축되고 건전한 기업의 시장 퇴출이 우려된다"며 "기업 경영의 자율성 역시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 종합건설업계는 물론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전체 건설업계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위윤기자

【 2016.11.24(목) 강원도민일보 】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24일

오후 1시 충주 건설
경영연수원에서 열
리는 '2016 대표자
경영연수'에 참석
한다.

【 2016.11.24(목) 건설경제 】

건협 강원도회, 2016년 대표자 경영연수 이틀간 실시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사진)는
24일부터 이틀
간 충주 건설경

영연수원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6 대표자 경영연수를 실시한
다. 이번 연수는 건설업의 법률 및
세무관리, 교양강좌 등으로 구성
된다.